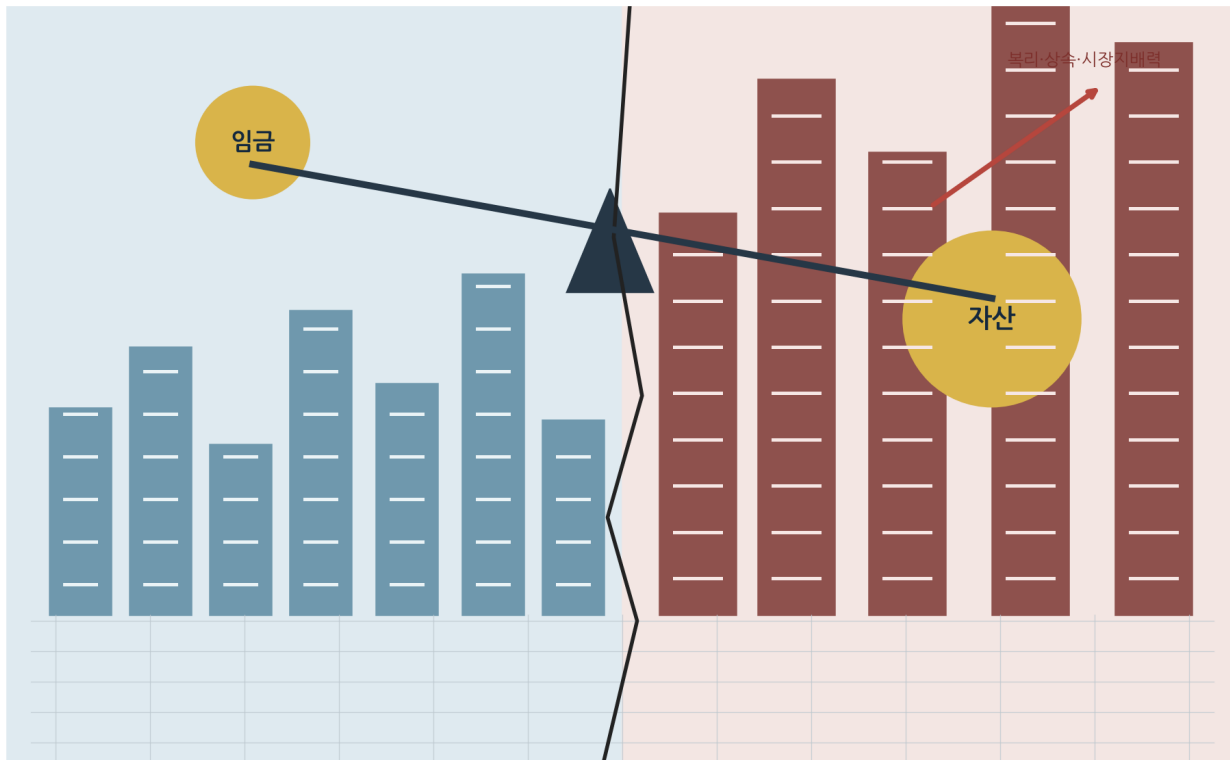


미국 양극화와 불평등의 구조

경제적 원인에서 정치적 고착과 세대 간 재생산까지



주요 출처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참고 자료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발행 일자	2026년 8월 3일
판권	Research Edition 1.0

본 보고서는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단일 지표가 아니라 소득, 자산, 계급, 노동시장, 비용구조, 인종·지역, 정치제도, 정책반응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한다. 수치는 2026년 8월 3일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공식 자료를 우선 사용하되, 자료별 기준연도와 정의가 다를 경우 이를 명시했다.

요약: 미국의 갈등은 좌우만이 아니라 “상하”의 문제다

미국의 양극화는 경제적 격차가 정체성 갈등으로 “변환”되고, 정체성 갈등이 다시 분배정책을 봉쇄하는 순환구조다. 좌우 대립은 실제이지만, 그 배후에는 임금과 생산성의 분리, 자산소유의 집중, 필수비용의 상승, 지역별 기회 격차, 정치 영향력의 불균등이 놓여 있다. 다만 상하 계급대립이 자동으로 하나의 정치연합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종, 종교, 학력, 이민, 지역, 문화가 경제적 이해를 교차시키고 때로는 은폐하거나 재편하기 때문이다.

핵심 판단

미국은 “경제적 양극화 → 생활세계의 분리 → 당파적·문화적 동원 → 정책 거부권과 엘리트 영향력의 강화 → 기회와 자산의 세대 간 재생산”이라는 자기강화 회로에 들어가 있다. 이를 끊으려면 세금·복지뿐 아니라 노동의 협상력, 주택·의료·교육의 가격, 경쟁정책, 지역투자, 정치제도를 함께 다뤄야 한다.

핵심 지표	최근 값	해석
가구 중위소득	2024년 83,730달러	2023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없음. 상위 소득분위의 개선이 더 뚜렷.
상위 1% 순자산 점유율	2026년 1분기 31.6%	1989년 3분기 약 23.3%에서 상승. 자산가격과 소유구조가 핵심.
상위 0.1% 순자산 점유율	2026년 1분기 14.4%	최상층 내부에서도 초집중이 진행.
하위 50% 순자산 점유율	2026년 1분기 2.5%	부채와 낮은 금융자산 보유가 총격흡수 능력을 제한.
노조 조직률	2025년 10.0%	1983년 20.1%의 절반 수준. 민간부문은 5.9%.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2009년 7월 이후 명목액 동결. 주별 격차가 커짐.
임차가구 비용부담	2023년 49.7%	소득의 30% 초과를 주거비로 지출. 흑인 임차가구는 56.2%.
국민의료비	2024년 5.3조 달러, GDP 18.0%	고용연계 보험과 높은 가격이 가구·기업·정부에 동시 부담.

주: 서로 다른 통계의 모집단과 개념을 직접 합산하지 않는다. 상세한 정의는 “자료 기준과 한계” 절 참조.

12개의 핵심 결론

- 불평등의 중심은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소유와 복리효과다. 주택, 주식, 사업체를 보유한 가구는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에서 유리하다.
- 1980년대 이후 제도 변화, 노조 쇠퇴, 금융화, 세계화, 기술 변화는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상위소득·자본소득의 비중을 높였다.
- 중산층의 약화는 “소득 감소”만이 아니라 의료·교육·주거·보육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올라 가처분 여력이 줄어든 현상이다.
- 인종별 자산격차는 현재의 개인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노예제, 토지·주택정책, 레드라이닝, 교육·고용 차별, 상속의 누적효과가 결합된 결과다.
- 성별·세대·학력·직업 격차는 독립적이지 않다. 돌봄 부담, 학자금부채, 주택진입 시점, 지역산업의 흥망이 교차한다.
- 해안 대도시의 고소득과 내륙의 쇠퇴를 단순 비교하면 오류가 생긴다. 해안 지역은 소득이 높지만 주거비가 높고, 내륙은 비용이 낮아도 기회·건강·인프라가 약할 수 있다.
- MAGA, 진보주의, 민주사회주의, 반엘리트 포퓰리즘은 서로 다른 문화언어를 쓰지만 “기존 제도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공유한다.
- 미국의 갈등은 좌우와 상하가 교차한다. 부유한 자유주의자와 부유한 보수주의자, 저소득 민주당 지지자와 저소득 공화당 지지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 정책결정은 대중여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금, 접근, 전문성, 로비, 규제기관-산업 간 인사 이동, 미디어 소유와 의제 설정이 정책의 선택지를 좁힌다.
- 불평등은 건강, 기대수명, 범죄, 가족형성, 주택소유, 학교, 지역 공동체, 언론 신뢰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누적적 영향을 준다.
- 단일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장 규칙, 세후이전, 보편적 기본서비스, 자산형성, 반독점, 정치개혁을 조합해야 한다.
- 향후 10년은 AI와 고금리·재정압박이 분기점이다. 생산성 이익의 배분과 주택·의료 공급개혁에 성공하면 완화될 수 있지만, 자산·지역·학력의 격차가 확대되면 정치적 불안정이 구조화된다.

목차

- 1. 핵심 개념과 측정법
- 2. 역사적 전개: 압축과 재확대
- 3. 소득·자산·노동시장의 핵심 지표
- 4. 불평등을 만드는 작동 메커니즘
- 5. 인종·성별·세대·학력·지역 격차
- 6.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 7. 이론과 연구의 비교
- 8. 엘리트 포획과 정책 결정
- 9. 사회적 결과
- 10. 정책 대안의 효과와 한계
- 11. 국제 비교
- 12. 통합모형과 2026-2036 시나리오
- 13. 자료 기준과 한계
- 14. 참고문헌·데이터 출처



그림 1. 불평등은 시장소득에서 시작하지만 자산, 기회, 정치적 영향력으로 층층이 확장된다.

1. 핵심 개념과 측정법

1.1 일곱 개념의 구분

개념	핵심 질문	대표 지표	주의점
경제적 불평등	생활자원과 경제적 기회가 얼마나 불균등한가?	소득·소비·자산·부채·빈곤·이동성	여러 차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소득격차	한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벌거나 이전받는가?	중위소득, 분위비율, 지니계수, 상위소득 점유율	세전/세후, 가구/개인, 현금/현물에 따라 값이 달라짐.
자산격차	축적된 순자산과 충격흡수 능력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순자산, 주택·주식·사업체 보유율, 상위자산 점유율	부채와 평가가격 변동에 민감. 소득보다 훨씬 집중됨.
계급 양극화	경제적 위치와 권력·생활양식이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되는가?	직업, 소유, 고용안정, 학력, 사회이동, 계급정체성	계급은 소득 하나가 아니라 시장지위·권력·지위의 결합.
정치적 양극화	정당·유권자·엘리트의 이념과 상호적대가 멀어지는가?	의회 투표, 정당 동일시, 상대당 혐오, 정책거리	정책 차이와 감정적 적대는 구분해야 함.
문화적 양극화	도덕·종교·정체성·생활양식이 적대적 진영으로 조직되는가?	낙태·총기·인종·성·교육·이민 태도, 미디어 소비	경제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역적 양극화	성장·산업·인구·정치성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가?	도시·농촌, 해안·내륙, 대도시·소도시, 지역 GDP·건강·투표	생활비와 인구구성 차이를 조정해야 함.

1.2 불평등을 측정하는 네 개의 렌즈

첫째, 분포의 중앙: 중위소득과 중위자산은 “전형적 가구”를 보여준다. 평균은 상위값에 크게 끌리므로 중앙의 생활수준을 과장할 수 있다.

둘째, 상위 집중: 상위 10%, 1%, 0.1% 점유율은 최고소득과 최고자산의 집중을 포착한다. 특히 자본이득과 사업체 지분을 포함할수록 집중도가 커진다.

셋째, 전체 분포: 지니계수, 90/10·50/10·90/50 비율은 분포의 넓이를 요약한다. 그러나 같은 지니계수라도 중산층 붕괴형과 최하층 빈곤형은 다를 수 있다.

넷째, 이동성: 한 시점의 격차가 커도 세대 간 이동이 높다면 결과가 다르다. 절대이동성은 부모보다 더 버는가, 상대이동성은 출신계층과 성인계층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약한가를 묻는다.

따라서 “미국의 불평등이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은 반드시 누구의, 어떤 소득·자산을, 어느 기간에, 세전인지 세후인지, 가격변동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2. 역사적 전개: 압축과 재확대



그림 2. 20세기 이후 미국 불평등의 역사적 국면. 각 국면은 기술만이 아니라 법·조세·노동제도·전쟁·정치연합의 결과다.

2.1 20세기 초: 산업화, 독점, 이민, 취약한 사회보장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산업화는 철도, 철강, 석유, 금융의 거대기업과 막대한 사적 부를 창출했다. 노동자는 농촌과 해외에서 도시로 유입됐지만 단체교섭권과 사회보험은 취약했다. 반독점법, 진보주의 개혁, 소득세 도입이 나타났으나 대공황 이전의 경제체제는 높은 자산집중과 낮은 안전망을 특징으로 했다. 이 시기의 불평등은 “기술의 자연적 결과”라기보다 기업결합, 금융권력, 토지·특허·관세, 취약한 노동법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었다.

2.2 뉴딜과 제2차 세계대전: 제도적 압축

대공황은 시장질서의 정당성을 흔들었고 뉴딜은 사회보장, 실업보험, 은행·증권 규제, 공공고용, 최저임금,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확대했다. 전시 동원은 완전고용, 임금통제, 누진과세, 대량생산을 결합했다. 결과적으로 상층의 세후소득과 자산집중이 낮아지고 조직노동의 협상력이 커졌다. 다만 농업·가사노동의 배제, 인종차별적 행정, 주택·교육의 분리 때문에 혜택은 불균등했다.

2.3 1945-1979년: 중산층 성장과 그 한계

전후 수십 년은 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복지후생, 주택소유, 대학진학과 비교적 넓게 연결된 시기였다. 강한 제조업, 노조, 누진세, 금융규제, 연방주택정책, GI Bill, 대중소비가 중산층 확대를 지탱했다. 그러나 여성과 비백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차별과 직종분리 속에서 이뤄졌고, 교외화와 고속도로·모기지 정책은 백인 가구의 주택자산 축적을 더 크게 지원했다. “위대한 압축”은 보편적 평등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더 유리한 압축이었다.

2.4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전환과 규칙의 재설계

1980년대 이후 감세,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노조 억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민영화·외주화가 확산됐다. 기술 변화와 세계화는 생산성을 높였지만 노동자가 그 성과를 획득할 제도적 통로는 약해졌다. 최고경영자 보상, 금융·법률·기술 분야의 초고소득, 자본이득의 확대가 상위층을 끌어올렸고, 제조업·루틴 사무직의 지역적 쇠퇴가 중간층을 압박했다.

2.5 2008년 이후: 위기, 자산회복, 플랫폼화,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을 주된 자산으로 보유한 가구에 큰 손실을 줬고, 이후의 저금리와 자산매입은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식·부동산 보유자의 자산가치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팬데믹 시기 재정지원은 빈곤과 실업 충격을 완화했지만 공급계약, 주택부족, 자산가격 상승,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은 계층별로 다른 효과를 냈다.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는 유연성을 늘렸으나 위험과 비용의 개인화, 숙련·지역별 격차, 감시와 알고리즘 관리 문제를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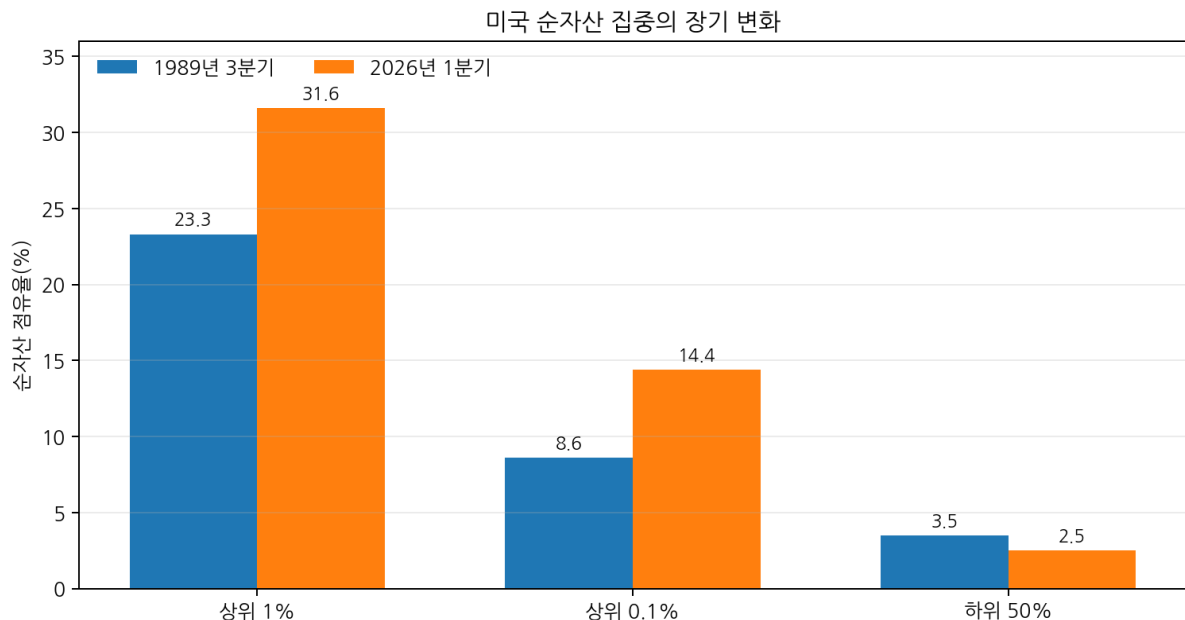
3. 소득·자산·노동시장의 핵심 지표

3.1 소득: 중앙은 정체, 상단은 더 빠르게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4년 실질 가구 중위소득은 83,730달러로 2023년 82,690달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90번째 백분위 소득은 4.2% 증가했다. 이는 단년의 결과이지만, 경기회복의 이익이 분포 상단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조사국의 “money income”은 세전 현금소득이며 비현금 복지와 자본이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CBO의 1979-2022 장기 비교에서는 상위 1%의 세전소득 점유율이 약 9%에서 18%로 상승했고 하위 20%는 5%에서 4%로 낮아졌다. WID는 국민계정과 세무자료를 결합한 “국민소득” 개념을 사용하므로 값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023년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약 47%를 차지했다는 추정은, 소득조사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상층의 사업소득·자본소득을 포함한 결과다.

3.2 자산: 상위 1%와 0.1%의 초집중



자료: Federal Reserve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 FRED. 분기별 추정치.

그림 3. 상위 1%·0.1%와 하위 50%의 미국 순자산 점유율. 1989년과 2026년의 비교는 자산집중의 방향을 보여주며, 분기별 추정치는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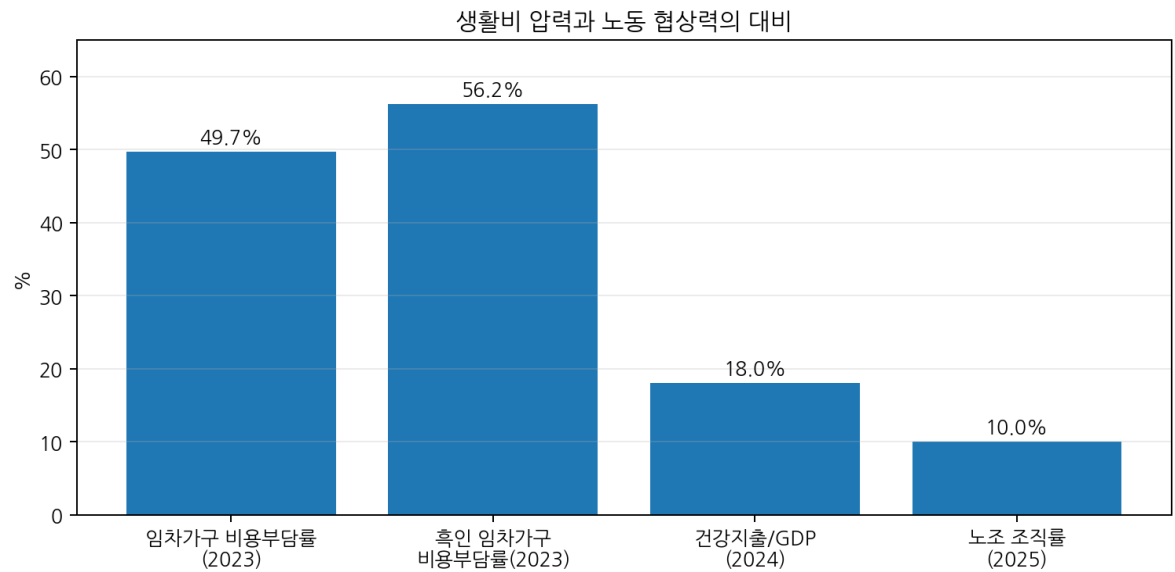
연준의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에 따르면 상위 1%의 순자산 점유율은 1989년 3분기 약 23.3%에서 2026년 1분기 31.6%로 높아졌다. 상위 0.1%는 8.6%에서 14.4%로 상승한 반면, 하위 50%는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이는 상위 1% 내부에서도 부가 더 집중됐음을 뜻한다.

자산격차의 핵심은 수익률뿐 아니라 참여 여부다. 주식, 사모기업, 상업용 부동산, 세제혜택 계좌를 보유한 가구는 시장상승의 복리효과를 얻는다. 하위 가구는 자동차·소비재 비중이 높고 신용카드·학자금·의료부채를 보유하기 쉬워 순자산과 수익률이 낮다. 동일한 인플레이션도 채무자·채권자, 주택보유자·임차인, 고정금리·변동금리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3.3 노동: 교섭력, 최저임금, 고용형태

지표	최근 수치	구조적 의미
노조 조직률	2025년 10.0%; 민간 5.9%, 공공 32.9%	기업·산업 차원의 임금규범과 복지후생 협상력이 약화. 2025년 자료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11개월 평균이어서 주별 수치에 주의.
노조/비노조 임금	2025년 1,404달러 대 1,174달러	단순 비교이며 직종·산업·연령 등을 통제하지 않음. 그래도 단체협약의 임금·혜택 효과를 시사.
연방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 2009년 7월 이후 동결	실질가치 하락과 주별 규칙의 분화. 저임금 주와 고임금 주의 격차 확대.
플랫폼·계약 노동	통계와 법적 분류가 분절적	유연성은 증가하지만 보험·휴가·실업보호·교섭권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자동화·AI	직무별 보완/대체 효과가 혼재	고숙련자는 생산성 보완, 루틴·중간숙련 직무는 재설계·감축 위험. 소유권과 협상력이 배분을 결정.

3.4 생활비: 소득보다 “필수재 가격”이 체감불평등을 만든다



자료: Census Bureau, CMS, BLS. 서로 다른 모집단·정의의 지표이므로 직접 합산하지 않음.

그림 4. 주거·의료 부담과 노동조직률의 대비. 수치는 서로 다른 정의와 연도를 사용한 구조지표다.

주거, 의료, 교육, 보육은 선택재가 아니라 계층 재생산을 결정하는 필수재다. 2023년 임차가구의 49.7%가 소득의 30%를 초과해 주거비를 지출했고, 흑인 임차가구는 56.2%였다. 2024년 미국 국민의료비는 5.3조 달러, 1인당 15,474달러, GDP의 18.0%였다. 공립 4년제 대학의 평균 순가격과 등록금은 보조금·거주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학자금부채와 기회비용은 청년층의 주택구입·가족형성 시점을 늦출 수 있다.

4. 불평등을 만드는 작동 메커니즘

메커니즘	작동 경로	승자/패자 효과	정책 레버
노동소득·생산성 분리	노조 약화, 외주화, 성과급·주식보상, 최저 임금 정체	상층 전문직·경영진·주주 우위; 중하층 임금 못 약화	교섭권, 임금기준, 근로자 분류, 이익공유
자본소득의 복리	주식·부동산·사업체 가치 상승, 세제혜택 계속	초기자산과 상속이 큰 가구의 누적 우위	자본이득·상속 과세, 보편적 저축계좌, 주택공급
금융화	주주환원, 레버리지, 사모자본, 수수료·신용 체계	자산보유자·금융전문가 수익; 채무자 위험 증가	건전성·소비자보호, 경쟁, 기업 지배구조
세계화와 공급망	수입경쟁·오프쇼어링·대규모 시장	소비자는 저가, 글로벌 기업은 규모이익; 특정 지역 노동자는 집중손실	조정지원, 산업·지역정책, 노동·환경기준
자동화·디지털화	루틴 대체, 슈퍼스타 기업, 네트워크 효과	고숙련·플랫폼 소유자 우위; 중간직무 공동화	교육·전환, 데이터·경쟁정책, AI 이익공유
필수비용 상승	주택공급 제약, 의료가격, 교육 자격경쟁	기존 주택·자격 보유자 우위; 신규진입자 불리	공급확대, 가격투명성, 공공อุป선·보조
조세·상속	과세기반, 실현주의, 공제·회피, 세대이전	자본이득·상속을 활용할 수 있는 상층 우위	누진성, 집행, 과세시점·기준가액 개혁
인플레이션·금리	실질임금, 부채, 주택·주식 할인율, 고용	고정금리 채무자는 일부 이익; 신규차입자·임차인 부담	물가안정, 공급정책, 표적지원, 금융안정

4.1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대칭

노동은 시간과 교섭력이 제한되지만 자본은 기업·지역·국경을 이동하며 복리로 축적된다. 최고경영자와 금융·기술 전문직의 보상이 주식과 옵션에 연동되면 노동소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격 상승의 성격을 가진다.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는 임대료·보험료·교통비 상승을 즉시 감당해야 하며 저축할 여력이 줄어든다.

4.2 제조업 공동화는 국가평균보다 지역충격이 중요하다

무역과 자동화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자후생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은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된다. 공장이 사라지면 임금만이 아니라 지방세수, 학교, 소매업, 병원, 노동조합, 지역정체성이 함께 약해진다. 재취업 프로그램이 개인의 기술 훈련만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만들지 못하면 이동비용과 주택시장 장벽 때문에 회복이 어렵다.

4.3 인플레이션과 금리정책의 계층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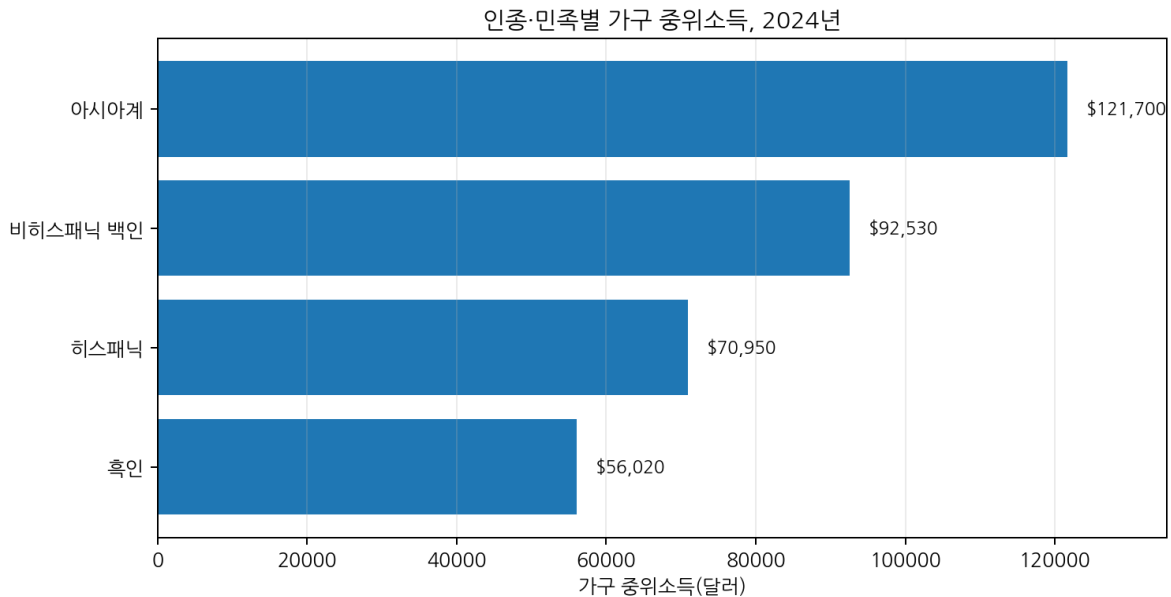
인플레이션은 현금·고정소득의 실질가치를 낮추고 식료품·에너지·임대료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더 크게 체감된다.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가진 채무자는 부채의 실질가치 하락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금리인상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신규 주택구입자, 중소기업, 고부채 가구의 조달비용을 높인다. 동시에 할인율 상승은 주식·채권·부동산 가격에 충격을 주므로 자산보유 상층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평균적 효과”가 아니라 보유자산, 부채구조, 고용위험의 조합이다.

4.4 규칙이 수익을 만든다: 지대추구와 시장지배력

불평등은 경쟁의 결과만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칙에서 발생한다. 특허·라이선스·토지이용 규제·비경쟁계약·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병원과 보험사의 집중·금융수수료·세법의 복잡성은 일부에게 경제적 지대를 제공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의 핵심 주장은 시장이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고 법과 제도가 가격·권리·위험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5. 인종·성별·세대·학력·지역 격차

5.1 인종·민족: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가 더 깊다



자료: U.S. Census Bureau, Income in the United States: 2024. 범주와 표본오차에 유의.

그림 5. 2024년 인종·민족별 가구 중위소득. 가구 구성, 연령, 학력, 지역, 이민선별, 표본오차가 함께 작용하며 집단 내부 격차도 크다.

2024년 가구 중위소득은 아시아계 121,700달러, 비히스패닉 백인 92,530달러, 히스패닉 70,950달러, 흑인 56,020달러였다. 그러나 소득만으로 역사적 격차를 축소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연준의 2022 Survey of Consumer Finances 분석에서 전형적 백인 가족의 순자산은 전형적 흑인 가족의 약 6배, 히스패닉 가족의 약 5배였다. Census SIPP 등 다른 자료는 가구·가족 정의와 자산 항목이 달라 더 큰 비율을 제시하기도 한다.

역사적·제도적 배경

- 노예제와 재건 실패: 무급노동과 토지소유 배제, 흑인법·짐크로, 폭력과 정치권 박탈이 초기자산 형성을 막았다.
- 주택금융과 레드라이닝: 연방·지방의 모기지·구역제·인종분리 관행이 백인 교외주택의 자본이득과 흑인 지역의 저평가를 누적시켰다.
- 교육·노동시장 분리: 학교재정의 지방세 의존, 직종분리, 차별적 채용·승진·임금, 형사사법 노출이 소득과 상속을 제약했다.
- 이민선별과 집단 내부 다양성: 아시아계·히스패닉이라는 광범위한 범주 안에는 출신국, 난민·숙련이민, 세대, 언어, 지역에 따른 매우 큰 격차가 있다.
- 상속의 누적: 현재의 상속액은 과거 주택·사업체·연금 접근의 결과다. 동일한 소득의 가구라도 부모의 지원·부채·주택상속이 다르면 위험감수와 교육투자가 달라진다.

5.2 성별: 임금, 돌봄, 직종, 자산의 결합

2024년 연중 전일제 근로 여성의 남성 대비 소득비율은 80.9%였다. 이 격차는 동일직무 동일시간의 차별만이 아니라 직종·산업 분리, 근속, 출산·돌봄으로 인한 경력중단, 근무시간, 협상, 관리직 진입, 주식보상 접근의 차이를 포함한다. 여성은 평균수명이 길고 돌봄책임이 크며 은퇴자산 축적기간이 짧을 수 있어 노후빈곤과 자산격차로 이어진다. 인종과 성별이 교차하면 격차는 더 복잡적이다.

5.3 세대: 주택 진입시점, 학자금, 자산가격

고령세대가 모두 부유하고 청년세대가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가격과 금리가 낮던 시기에 주택·주식을 취득한 가구는 큰 평가이익을 얻은 반면, 최근 진입자는 높은 가격·금리·임대료를 동시에 부담한다. 학자금부채와 불안정 고용은 결혼·출산·창업·주택구입을 늦출 수 있다. 세대갈등의 핵심은 연령 자체보다 자산시장에 들어간 시기와 가족의 이전능력이다.

5.4 학력·직업: 대학 프리미엄과 “학위 없는 다수”

지식집약 산업과 대도시의 성장으로 대학학위의 평균적 보상은 높아졌지만, 학위 비용과 실패위험도 커졌다. 학위가 없는 노동자는 제조·운송·서비스·돌봄·건설에 집중되어 자동화, 경기변동, 산업재편에 더 노출될 수 있다. 동시에 일부 숙련기술직은 높은 임금을 제공하므로 정책은 “모두의 4년제 대학”보다 직업교육, 도제, 지역기업 수요, 이전 가능한 자격을 포함해야 한다.

5.5 공간 격차: 도시-농촌, 해안-내륙, 북부-남부

축	상대적 강점	구조적 부담	정치적 효과
해안 대도시	기술·금융·대학·문화·고임금 네트워크	주택·통근·보육비, 자산가·서비스노동자 양극화	고학력 자유주의와 초부유층의 공존
내륙·산업도시	토지·주택비용, 물류·제조 기반	공장폐쇄, 인구유출, 세수·병원·학교 약화	반세계화·반엘리트 동원 가능성
농촌	공동체 연결, 자연자원, 일부 제조·에너지	의료·광대역·교육·고용 선택 부족, 고령화	문화보수와 국가불신이 결합
남부	인구·기업유입, 낮은 비용, 물류·에너지	낮은 임금·노조, 복지의 주별 격차, 역사적 인종 분리	친기업 규칙과 인종·종교정치의 결합
북부·중서부	산업유산, 노조·공공서비스 기반	탈산업화, 낡은 인프라, 도시·교외 분리	노동정치와 우파 포퓰리즘의 결합

6.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6.1 경제적 불만은 왜 문화전쟁으로 나타나는가

경제적 충격은 곧바로 계급정치가 되지 않는다. 유권자는 손실의 원인을 기업, 정부, 이민자, 중국, 도시 엘리트, 인종정책, 규제, 세금, 기술 중 어디에 귀속할지 선택한다. 정당, 미디어, 종교·시민단체, 소셜플랫폼은 이 원인서사를 제공한다. 따라서 동일한 임금정체를 경험한 유권자가 한쪽은 노조·복지·부유세를, 다른 쪽은 국경통제·관세·규제완화·문화보수주의를 지지할 수 있다.

6.2 민주당-공화당 대립의 경제적 재편

민주당은 도시, 대졸층, 소수인종, 전문직, 노동조합, 진보적 청년을 결합하지만 월스트리트·기술·전문서비스의 고소득 지층도 포함한다. 공화당은 기업·자산가·복음주의자·농촌·소도시·비대졸 백인과 최근 일부 비백인 노동계층을 결합한다. 두 연합 모두 내부 계급갈등을 안고 있어 경제정책은 문화쟁점보다 일관되게 정렬되지 않는다.

6.3 MAGA, 진보주의, 민주사회주의, 포퓰리즘

흐름	공통 기반	주된 적대대상	경제적 처방의 차이
MAGA형 우파 포퓰리즘	탈산업화, 국경·경제성 불안, 제도 불신	글로벌리스트, 관료, 주류언론, 이민, 중국	관세·국경통제·감세·규제완화·에너지확대가 혼합
진보주의	생활비, 인종·성별 격차, 기후·기업권력	대기업, 부유층, 구조적 차별	노동권·공공투자·규제·누진과세·사회서비스
민주사회주의	의료·주택·교육의 상품화, 노동의 약화	역만장자 계급, 독점, 사적 보험·임대권력	보편적 프로그램, 공공소유·공공요금, 강한 노조
반정치·음모론	불투명한 권력, 삶의 통제감 상실, 정보불신	“딥스테이트”, 금융·언론·과학 엘리트 등	일관된 경제정책보다 반제도 정서가 중심

6.4 좌우 대립인가, 상하 계급대립인가

판정

미국의 갈등은 “좌우 또는 상하”가 아니라 좌우 × 상하 × 인종·지역·학력의 다차원 갈등이다. 상하 구조는 자원과 기회의 기반을 결정하고, 좌우 구조는 그 불만을 해석하고 동원하는 언어를 제공한다.

상하 대립의 증거는 자산집중, 정책영향력의 불균등, 지역·학교·건강의 계층화에서 나타난다. 좌우 대립의 독자성은 낙태, 총기, 종교, 성적체성, 이민, 국가정체성과 같은 쟁점이 소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 정치적 전략은 두 축을 연결한다. 예를 들어 우파는 경제적 손실을 국가·문화·국경의 회복으로 번역하고, 좌파는 기업권력·차별·공공서비스의 문제로 번역한다.

6.5 감정적 양극화와 불신

Pew Research Center 조사들은 상대당을 단지 잘못된 정책의 지지자가 아니라 폐쇄적·부도덕·부정직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커졌고, 정치에 대한 피로와 분노도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적 양극화는 타협을 배신으로 만들고, 선거 패배를 정당한 순환이 아니라 체제위협으로 해석하게 한다. 경제적 불안은 음모론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통제감 상실, 지위하락, 제도불신을 통해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7. 이론과 연구의 비교

사상가·연구자	핵심 명제	미국 분석에 주는 통찰	한계·반론
칼 마르크스	생산수단 소유와 잉여의 배분이 계급 갈등의 기초	자본소득·기업권력·노동통제, 금융화와 소유 집중 설명	경제성·법·국가의 자율성, 중간계층과 민주제도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막스 베버	계급·지위·정당은 서로 다른 권력질서	소득이 비슷해도 학력·직업명예·인종·종교·지역이 정치행동을 달리함	거시적 축적동학보다 다차원적 분화에 강점.
사이먼 쿠즈네츠	산업화 초기 불평등 상승 후 성숙기에 하락하는 역U자	전후 압축을 발전단계로 해석하는 출발점	1980년 이후 선진국 재확대는 자동적 하락 가설을 약화. 정치·제도 변수 필요.
존 롤스	기본자유, 공정한 기회, 최소수혜자에게 이로운 차등만 정당	교육·보건·정치적 영향력의 실질적 평등 기준 제공	정책비용과 인센티브의 구체적 설계는 별도 분석 필요.
밀턴 프리드먼	시장경쟁과 선택의 자유, 제한정부; 음의 소득세 지지	규제포화·독점정부·복지의 복잡성 비판, 현금지원 논리	시장권력·상속·정보비대칭과 공공재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
토마 피케티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을 때 부의 집중 경향; 정치가 분배를 결정	자산·상속·세제·장기자료의 중요성, 초상층 집중 설명	r>g가 기계적 법칙은 아니며 저축·혁신·정책·평가방식에 민감.
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은 지대추구와 불안전시장, 규칙 설계의 결과	금융·독점·세법·규제포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	정부실패와 정책집행의 정치경제도 함께 평가해야 함.
앵거스 디턴	소득·교육·건강·기대수명의 연결, 비대출층의 절망사망	불평등을 생명과 존엄의 문제로 확장	인과경로가 지역·약물·의료·노동시장과 복잡하게 얽힘.
라지 체티	세대이동성은 장소·학교·가족·네트워크에 따라 크게 다름	우편번호와 성장환경이 성인결과를 형성, 지역정책의 중요성	관찰자료의 정책변역, 이동선택과 일반균형 효과에 주의.
마틴 길렌스·벤저민 페이지	경제엘리트와 이익집단의 선호가 정책변화에 더 강한 독립효과	형식적 1인1표와 실제 정책반응성의 차이	1982-2002 자료와 모형·선호측정에 대한 후속 논쟁 존재.

7.1 통합적 해석

마르크스는 소유와 생산관계, 베버는 다차원적 지위, 롤스는 정당성의 규범, 프리드먼은 시장과 정부권력의 위험, 피케티는 장기 자산축적, 스티글리츠는 지대와 규칙, 디턴은 건강, 체티는 장소와 이동성, 길렌스는 정책반응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현실은 어느 하나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소유구조 + 시장지위 + 제도규칙 + 사회적 지위 + 공간 + 정치적 영향력을 결합해야 한다.

8. 엘리트 포획과 정책 결정

8.1 포획은 뇌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엘리트 포획은 불법적 부패만을 뜻하지 않는다. 합법적 선거자금, 로비, 전문지식의 독점, 규제기관과 산업 간 인사 이동, 소송·특허·조세 설계, 싱크탱크와 대학의 의제설정, 언론 소유와 광고시장,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정책의 “가능한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을 포함한다.

통로	메커니즘	정책에 미치는 영향	통제장치
선거자금	후보·정당·PAC·슈퍼PAC에 자금 제공	접근성, 의제우선순위, 후보선발, 광고·조직력	공시, 기부규칙, 공적자금, 소액기부 매칭
로비	법안·규칙·예산에 전문정보와 압력 제공	세부조항·예외·집행예산에서 비가시적 영향	회의기록·등록·냉각기간·이해충돌 규칙
회전문	규제자·피규제기업 간 인사 이동	관계·정보·향후 고용기대가 감독강도를 약화할 위험	취업제한, 자산·관계 공개, 독립감사
규제 포획	규제기관이 공익보다 산업의 관점·정보에 의존	규칙의 완화, 집행지연, 복잡성 증가	독립성, 소비자·노동자 참여, 인력·예산 강화
언론·플랫폼 소유	소유·광고·알고리즘이 의제와 가시성 결정	갈등 프레임링, 지역뉴스 약화, 정보집중	소유투명성, 경쟁정책, 공익·비영리 지역뉴스
법률·조세 전문성	복잡한 규칙을 활용한 회피·중재·소송	상충의 실효세율·규제비용 감소, 진입장벽	단순화, 집행역량, 실소유자·국제정보 공유

8.2 실증연구와 해석의 주의

길렌스와 페이지의 2014년 연구는 1982-2002년 정책사례를 분석해 경제엘리트와 기업 이익집단의 선호가 강한 독립효과를 보인 반면 평균 시민의 선호는 다른 행위자의 선호를 통제하면 거의 독립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미국은 곧 과두제”라는 단순 결론보다, 선호가 충돌할 때 정책 반응성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경고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후속 비판은 정책코딩, 선호의 상관, 모형선택을 문제 삼으므로 결과의 크기에는 논쟁이 있다.

2023-2024년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약 20억 달러를 모금하고 약 18억 달러를 지출했다. 규모 자체가 포획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선거가 자금·데이터·광고·법률·조직의 고비용 산업이 됐음을 보여준다. GAO는 금융규제기관 등에서 회전문과 이해충돌이 규제포획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8.3 정책 고착의 미국적 조건

- 다수 거부점: 대통령, 양원, 위원회, 필리버스터, 법원, 연방-주 관계가 개혁을 분절한다.
- 주별 경쟁: 기업·고소득자의 이동 가능성은 주정부의 과세·규제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 정책 복잡성: 세액공제·고용주보험·민간계약 중심의 제도는 수혜자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고 중개산업을 만든다.
- 인종화된 복지정치: 사회정책이 인종·이민·도덕성의 언어로 논쟁되면 계급연합이 분열된다.
- 지역뉴스 쇠퇴: 지방정부·기업·병원·학교를 감시할 정보기반이 약화되면 포획비용이 낮아진다.

9. 불평등의 사회적 결과

영역	작동 경로	관찰되는 결과	인과 해석의 주의
사회이동성	학교·주거·네트워크·범죄노출·환경의 누적	같은 저소득 출신이라도 성장지역에 따라 성인소득이 크게 다름	지역선택과 가족특성, 정책의 일반 균형 효과를 고려.
교육기회	세수기반, 주거분리, 사교육·입시정보, 부채	학교질·졸업·전공·대학진학·완주 격차	학력은 원인이자 결과. 학위 공급만으로 일자리 질이 보장되지 않음.
건강·기대수명	보험, 노동위험, 환경, 스트레스, 약물, 식품·주거	비대졸 성인의 사망·건강악화, 지역별 수명 격차	개별 행동과 구조적 조건을 함께 분석.
범죄·안전	집중빈곤, 기회부족, 불신, 총기, 경찰·사법	피해와 처벌이 특정 지역·집단에 집중	불평등은 단일 원인이 아니며 범죄 유형·시기별 차이 큼.
가족·출산	주거·보육·의료·고용 불안, 시간빈곤	결혼·출산 지연, 단독가구·세대동거 증가	가치관 변화와 경제제약을 분리하기 어려움.
주택소유	선납금·신용·공급·지역가격·부모지원	임차·소유 자산격차, 세대·인종 간 격차	주택은 자산이면서 필수재; 가격 상승은 소유자와 신규진입자에 반대효과.
공동체·신뢰	기관폐쇄, 인구유출, 지역뉴스 약화, 불평등한 접촉	사회자본·기관신뢰·정치참여의 분화	부유한 지역도 고립과 양극화를 경험할 수 있음.
민주주의 안정	정책반응성 격차, 패배의 비용, 상호적 대	정당성 위기, 타협실패, 음모론·정치폭력 위험	경제격차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엘리트 전략이 중요.

9.1 장소가 운명을 만드는 정도

Opportunity Atlas는 거의 전체 미국을 포괄하는 약 2천만 명의 아동 자료를 인구조사구 단위로 연결해, 비슷한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동의 성인소득·수감·결혼·주거 결과가 장소에 따라 크게 다름을 보여준다. 부모소득 약 27,000달러 수준의 아동을 비교했을 때 동일 카운티 내 인구조사구 간 성인 가구소득의 표준편차가 10,420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은 “기회가 국가 평균이 아니라 동네에서 배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9.2 건강과 “절망사망”

디턴과 케이스는 대학학위가 없는 미국 성인의 건강과 기대수명 악화, 약물과 알코올, 자살 등 절망사망을 노동시장·가족·공동체·의료체계의 장기 약화와 연결했다. 불평등은 단지 소비의 차이가 아니라 고통, 통제감, 존엄, 생명의 길이의 차이가 될 수 있다. 다만 오피오이드 공급, 지역별 의료, 팬데믹, 인종별 경로가 다르므로 단일한 “경제원인”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9.3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 충격

첫째, 상층은 더 많은 정보·시간·기부·전문가·접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둘째, 하층은 정책이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투표·언론·전문가·사법·선거 자체를 불신할 수 있다. 이 두 과정이 결합하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질적 대표성과 패배수용 능력이 약화된다.

10. 정책 대안의 효과와 한계

정책 대안은 “한 가지 해법”이 아니라 패키지다

분배 이전

- 최저임금
- 노조·교섭권
- 반독점·경쟁정책

시장 안의 힘

- 노동 규칙
- 기업지배구조
- 플랫폼 노동 보호

분배 이후

- 누진세
- 아동세액공제
- 보편적 의료

자산·기회

- 교육·주택
- 상속·자본과세
- 지역투자

설계 원칙: 근로 유인 + 협상력 + 기본서비스 + 자산 형성 +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관리

그림 6. 불평등 완화는 시장 전·시장 안·시장 후·자산과 기회를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정책	기대효과	주요 한계·위험	설계 포인트
누진소득세	세후집중 완화, 재원조달	회피·소득전환·주간 이동·정치저항	과세기반 확대, 집행, 단순화, 국제협력
부유세	미실현 자산과 초대형 부에 직접 접근	평가·유동성·헌법·회피·해외이동 논쟁	높은 면세점, 분할납부, 출국세, 강한 정보체계
상속·증여세	세대 간 자산집중 완화, 기회평등	신탁·평가기법·가업 유동성·정치저항	공제 정비, 실소유자 추적, 농장·중소기업 분할납부
법인세	초과이윤·국제이익에 과세, 재원	투자·임금·소비자에게 일부 전가, 이익이동	최저세, 비용공제, 국제공조, 경쟁정책 결합
자본이득세	노동·자본 과세격차 축소	실현잠금, 변동성, 창업·투자 논쟁	사망시 과세·기준가액, 손실대칭, 장기이연 이자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임금규범 상승	고용·시간·가격·자동화 조정 가능	지역·산업 단계화, 세액공제·중소기업 지원, 집행
노조·교섭 강화	임금·혜택·발언권, 산업표준 형성	노사갈등, 경직성, 산업별 편차	부문별 교섭, 신속선거, 오분류 방지, 공동결정
보편적 의료	보험·고용 연계 완화, 협상력·행정비용 개선	세금·전환비용, 공급·대기·가격통제 논쟁	수가·약가, 공공유선/단일지불자 선택, 전환보상
교육비 지원	인적자본·부채부담 완화	학위 인플레이션, 대학가격 전가, 비완주자 문제	완주·성과, 직업교육, 생활비, 책임성
주택정책	임대료·통근·분리 완화, 자산진입	지역반대, 건설기간, 금리·토지가격	용도지역, 인허가, 사회주택, 바우처, 교통 연계
기본소득	단순·보편 현금안전망, 협상력	재정비용, 기존서비스 대체, 물가·정치지속성	부분기본소득/음의소득세, 세제환수, 주택공급
아동세액공제	아동빈곤·식품불안 감소, 장기인적자본	재정비용, 근로요건·환급성 논쟁	완전환급, 경기지급, 행정접근성
반독점정책	가격·임금·혁신·진입 개선, 정치권력 분산	시장정의·소송기간·규모의 효율성 논쟁	합병심사, 플랫폼 규칙, 노동시장 경쟁, 공공조달

10.1 정책효과는 평균과 분포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지만 일부 고용·시간·가격 조정이 생길 수 있다. CBO의 2021년 연방 15달러안 분석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누적임금 증가와 고용감소 가능성을 동시에 추정했다. 따라서 정책논쟁은 “효과가 있다/없다”가 아니라 수혜규모, 손실분포, 보완정책, 지역별 조정속도를 비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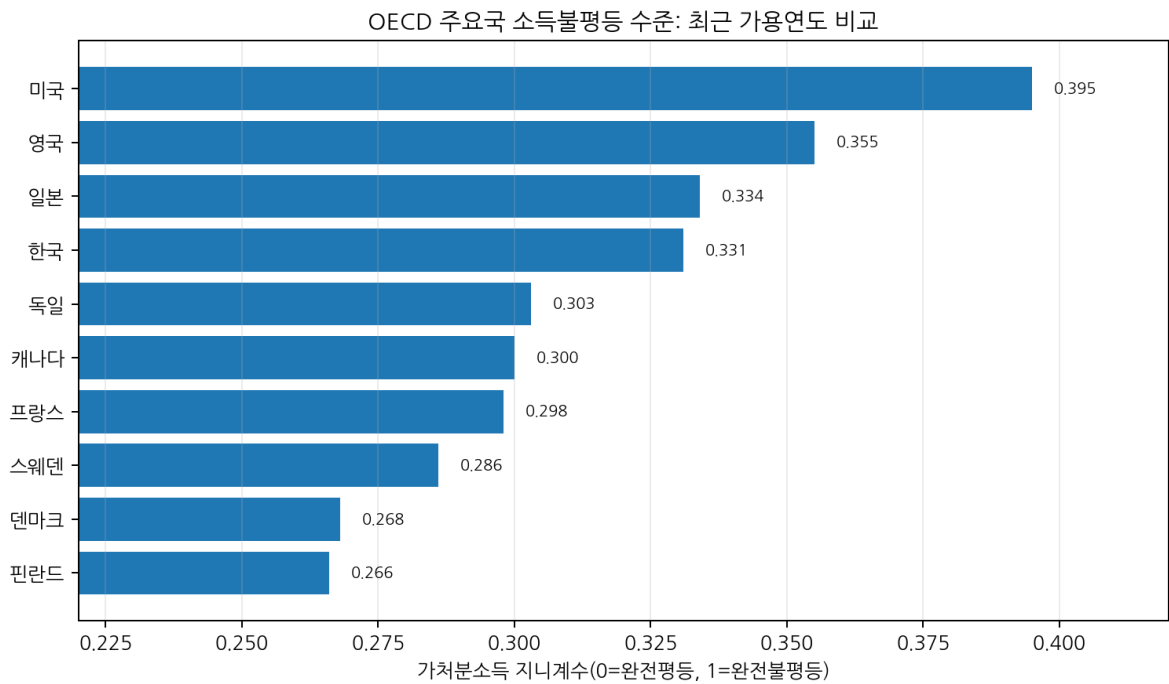
10.2 2021년 아동세액공제가 보여준 것

2021년 확대 아동세액공제는 290만 명의 아동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보충빈곤율 기준 아동빈곤은 2021년 5.2%에서 확대조치 종료 후 2022년 12.4%, 2023년 13.7%로 상승했다. 거시경제와 다른 프로그램도 영향을 주지만, 현금이전의 설계가 단기간에 빈곤율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10.3 가장 현실적인 패키지

- 노동시장: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산업·지역별 교섭, 비경쟁계약·오분류 제한, 임금·스케줄 투명성.
- 필수비용: 주택공급과 바우처, 약가·병원시장 경쟁, 보육·커뮤니티칼리지·직업훈련.
- 세금·이전: 환급형 아동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본이득·상속의 과세기반 정비, IRS 집행역량.
- 자산형성: 저소득 아동계좌, 첫주택 지원을 공급개혁과 결합, 은퇴저축 자동가입·매칭.
- 경쟁·정치: 반독점, 로비·회전문 투명성, 지역뉴스·공공데이터, 선거행정 신뢰 강화.

11. 국제 비교: 미국은 왜 특별히 불평등한가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Society at a Glance 2024. 국가별 기준연도(대체로 2018-2023)가 다르며 반올림한 비교용 수치.

그림 7. OECD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최근 가용연도 비교. 국가별 기준연도가 다르므로 순위보다 미국이 고불평등군에 속한다는 구조적 위치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권역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	미국과의 핵심 차이	자국의 취약점
캐나다	주정부 단일지불형 의료, 이전·세액공제, 이민정책	의료의 고용연계와 가계가격 위험이 낮음	주택비·지역·원주민 격차, 생산성 문제
영국	NHS, 전국적 복지·최저임금	의료 접근의 보편성이 더 강함	런던·지역 격차, 긴축·주택·생산성 경제
독일	공동결정, 산별교섭, 도제교육, 사회보험	노동자의 기업·산업 내 제도적 발언권	수출의존, 저임금부문, 동서 격차
프랑스	높은 사회지출, 공공서비스, 노동보호	세후이전의 재분배가 더 강함	고용진입·청년실업, 재정·조세저항
일본	압축된 임금구조, 보편적 의료, 주택공급의 유연성	의료·주택 비용의 상대적 통제	비정규·성별 격차, 고령화·저성장
한국	보편적 건강보험, 교육투자, 성장·산업정책	의료 보편성은 높지만 자산·교육경쟁은 유사한 압력	주택·사교육·노인빈곤·노동이중구조
북유럽	높은 세금, 보편복지, 강한 노조·교섭, 적극적 노동시장	시장소득 격차를 줄이고 세후이전을 강화	고세율 정당성, 이민통합, 고령화·주택
미국	혁신·자본시장·고등교육·기업가정신	약한 노조, 분절복지, 고용주 의료, 높은 교육·주택비, 정치적 거부감	기회와 혁신이 크지만 손실의 사회화가 약하고 자산기반 격차가 큼

11.1 미국의 구조적 특수성: 일곱 가지

- 시장소득 격차: 임금분산이 크고 노동조합·산별교섭이 약하다.
- 재분배의 강도: 세금과 이전이 불평등을 줄이지만 다수 유럽국가보다 효과가 약하고 프로그램이 분절적이다.
- 고용연계 복지: 의료와 은퇴가 직장에 연결되어 실직·이직이 생활위험을 확대한다.
- 필수서비스의 가격: 의료·대학·보육·주택이 시장가격과 지역공급 제약에 크게 좌우된다.
- 인종화된 역사: 토지·주택·교육·노동시장 차별과 복지정치가 계급연합을 분할했다.

- 정치제도의 거부점: 연방제, 양원, 법원, 필리버스터, 주별 규칙이 전국적 개혁을 어렵게 한다.
- 자산기반 복지: 주택과 401(k)·IRA 같은 개인자산이 안정의 핵심이어서 시장상승은 격차를 확대한다.

11.2 미국의 장점도 함께 봐야 한다

미국은 대규모 자본시장, 대학·연구, 이민, 기업가정신, 기술확산에서 강점을 갖는다. 문제는 혁신 자체가 아니라 혁신의 위험과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미국의 연방제·인구규모·인종다양성·주별 차이를 고려해 전국 최소기준과 주·도시 실험을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12. 통합모형과 2026-2036년 시나리오



그림 8. 미국 양극화의 자기강화 회로: 경제적 원인 → 사회적 분리 → 정치적 동원 → 제도적 고착 → 불평등 재생산. 마지막 단계는 다시 첫 단계의 자원과 권력을 강화한다.

12.1 단계별 통합 설명

1단계 경제적 원인 - 노동의 교섭력 약화, 자산소유 집중, 독점·금융화, 산업·기술 변화, 주택·의료·교육 비용이 가계의 격차를 만든다.

2단계 사회적 분리 - 소득과 자산이 주거지, 학교, 혼인, 직업, 미디어, 의료, 이동수단을 분리한다. 서로 다른 계층이 일상에서 접촉하지 않는다.

3단계 정치적 동원 - 정당·미디어·운동은 경제적 불만을 계급, 인종, 이민, 종교, 국가정체성, 성별·문화의 언어로 조직한다.

4단계 제도적 고착 - 선거자금, 로비, 거부점, 주별 경쟁, 규제포획, 사법화가 승자에게 유리한 규칙을 유지하거나 개혁을 분절한다.

5단계 불평등 재생산 - 상속, 학교, 주택, 건강, 네트워크, 범죄·사법 노출, 정치참여가 세대 간 격차를 재생산한다.

12.2 2026-2036년의 세 가지 시나리오

낙관적: 생산성의 사회적 배당

AI·자동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보완형 투자와 훈련이 확산된다. 주택 인허가·건설, 약가·병원경쟁, 보육·교육 공급이 개선된다. 환급형 세액공제와 노동교섭, 경쟁정책이 초당적으로 일부 정착된다. 실질임금이 중하층에서 상승하고 지역투자가 제조·에너지·물류·서비스를 연결한다.

선행지표: 상위 1% 자산점유율 안정 또는 하락, 주거비 부담률 하락, 비대졸 실질임금 상승, 아동빈곤 감소, 지역별 기대수명 격차 축소, 상대당 정당성 인정 증가

중립적: 성장하지만 분절된 미국

생산성과 기업이익은 증가하지만 주택·의료·교육 개혁은 주별로 불균등하다. 일부 고숙련 노동자는 AI와 원격근무의 이익을 얻고, 서비스·루틴직은 임금상승과 불안정이 공존한다. 세액공제와 산업정책은 유지되지만 세계·노동·정치개혁은 제한적이다.

선행지표: 중위소득 완만한 증가, 자산집중 높은 수준 유지, 비용부담률 정체, 도시·농촌·학력 격차 지속, 선거 때마다 감정적 양극화 재점화

비관적: 자산·AI·지역의 삼중 분리

AI의 수익이 플랫폼·자본·고속권에 집중되고 중간직무가 빠르게 축소된다. 고금리·재정제약 속에서 주택공급과 사회서비스 투자가 부족하다. 기후·보험·의료비 충격이 취약지역을 압박하고, 관세·공급망 갈등과 이민정치가 물가·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한다. 선거불신과 제도보복이 강화된다.

선행지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상위 0.1% 자산집중 상승, 청년 주택소유 하락, 지역병원·학교 폐쇄, 절망사망·정치폭력 위험 상승, 정책의 주별 양극화

12.3 향후 10년의 핵심 감시지표

영역	핵심 지표	낙관 신호	위험 신호
분배	상위 1%·0.1% 자산점유율, 중위 순자산, 세후 지니	중하층 자산·저축률 상승	초상층 집중과 하위부채 동시 확대
노동	비대졸 실질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노조·교섭 적용률	생산성 이익의 임금전가	AI 생산성 상승과 임금정체의 분리
비용	임대료 부담, 무보험·의료부채, 교육·보육 준비용	공급증가와 비용부담 하락	소득보다 필수비용이 빠르게 상승
기회	세대이동성, 아동빈곤, 지역별 수명·학교·인터넷	저소득 지역의 격차 축소	우편번호에 따른 성인결과의 고착
정치	상대당 정당성, 선거신뢰, 정책반응성, 로비·자금 투명성	패배수용과 초당적 최소기준	정치폭력·음모론·보복적 제도사용 증가

13. 자료 기준과 한계

13.1 같은 “불평등” 수치가 다른 이유

자료원	핵심 개념	장점	한계·주의
Census CPS ASEC	세전 현금소득 (money income), 가구·개인	연례 공식 소득·빈곤, 인구집단 비교	자본이득·현물복지·세금 반영 제한, 상충 포착 한계
CBO	시장소득·세전·세후이전 소득, 가구규모 조정	세금·이전의 재분배 효과와 장기분포	발표 시차, 모형·행정자료 결합
Federal Reserve SCF	가족 순자산, 자산·부채 상세	부유층 과대표집, 자산구성·인종 비교	3년 주기, 조사오차·평가 변동
Federal Reserve DFA	분기별 순자산 분포, 국민계정과 SCF 결합	시의성, 상위·중간·하위 자산점유율	모형기반 추정, 비영리 포함·계층정의 확인 필요
IRS	신고소득·자본이득·세금	상충·세금 분석에 강함	비신고·비과세·가구개념, 실현되지 않은 이익 제외
WID	국민계정과 세무·조사자료를 결합한 분배국민계정	장기·국제비교, 상위소득·부의 포착	가정·배분모형에 의존, Census와 개념 불일치
OECD IDD	가구규모 조정 가처분소득 지니·빈곤	국제 표준 비교	국가별 기준연도·조사·행정체계 차이
BLS	임금·고용·노조·물가	노동시장 정의와 시계열	자영업·비정형 노동 포착 문제, 표본·개정
Pew 등 조사	정치태도·감정·신뢰	양극화의 심리·정치 차원	질문문구·시점·응답편향, 인과추론 제한

13.2 본 보고서의 원칙

- 수치는 가능한 한 기관명·기준연도·정의를 함께 표기했다.
- 2026년 분기 자료와 2024·2025년 연례 자료가 혼재하므로 시간정렬이 필요한 비교는 방향성 중심으로 해석했다.
- 인종·민족 범주는 사회적·행정적 분류이며 집단 내부의 출신·계층·세대 차이를 가릴 수 있다.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했다. 불평등과 건강·정치불신이 함께 움직여도 단일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다.
- 국제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가구규모 조정 기준을 우선했으며, 국가별 최신연도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했다.
- 정책평가는 목적뿐 아니라 고용·가격·투자·재정·행정·정치지속성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포함했다.

13.3 연구상 공백

플랫폼 노동, 사모자본의 기업·주택 영향, AI의 직무별 분배효과, 초고액 미실현 자본이득, 지역뉴스 쇠퇴와 정책포획의 인과효과는 통계가 빠르게 변화하거나 측정이 부족하다. 특히 “상위 0.01%의 실질 경제권력”은 소득·순자산만이 아니라 기업의결권, 데이터·플랫폼 통제, 정치·자선 네트워크를 포함해야 하지만 일관된 공식통계가 없다.

14. 참고문헌·데이터 출처

- [1] U.S. Census Bureau. Income in the United States: 2024, Current Population Reports P60-286 (2025). <https://www.census.gov/library/publications/2025/demo/p60-286.html>
- [2] Federal Reserve Board. Distributional Financial Accounts, data through 2026 Q1.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z1/dataviz/dfa/>
- [3]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Share of Net Worth Held by the Top 1% (WFRBST01134). <https://fred.stlouisfed.org/series/WFRBST01134>
- [4]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Share of Net Worth Held by the Top 0.1% (WFRBSTP1300). <https://fred.stlouisfed.org/series/WFRBSTP1300>
- [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Share of Net Worth Held by the Bottom 50% (WFRBSB5021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WFRBSB50215>
- [6] Federal Reserve Board. Survey of Consumer Finances: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19 to 2022.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files/scf23.pdf>
- [7]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nion Members - 2025, USDL-26-0229 (2026). <https://www.bls.gov/news.release/pdf/union2.pdf>
- [8] U.S. Department of Labor. History of Changes to the Minimum Wage Law. <https://www.dol.gov/agencies/whd/minimum-wage/history/chart>
- [9]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National Health Expenditure Fact Sheet, historical NHE 2024. <https://www.cms.gov/data-research/statistics-trends-and-reports/national-health-expenditure-data/nhe-fact-sheet>
- [10] U.S. Census Bureau. Nearly Half of Renter Households Are Cost-Burdened (2023 data).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4/09/renter-households-cost-burdened-race.html>
- [11]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Worst Case Housing Needs: 2025 Report to Congress. <https://www.huduser.gov/portal/publications/Worst-Case-Housing-Needs-2025.html>
- [12]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1979 to 2022. <https://www.cbo.gov/topics/taxes/distribution-household-income>
- [13] World Inequality Database. Methodology and United States distributional series. <https://wid.world/country/usa/>
- [14]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Income and Wealth Inequalitie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ociety-at-a-glance-2024_918d8db3-en/full-report/income-and-wealth-inequalities_7ac4178f.html
- [15]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 [16] Pew Research Center. The Polarization in Today's Congress Has Roots That Go Back Decades (and related political polarization reports). <https://www.pewresearch.org/topic/politics-policy/political-parties-polarization/political-polarization/>
- [17] Martin Gilens and Benjamin I. Page. Testing Theories of American Politics: Elites, Interest Groups, and Average Citizens, Perspectives on Politics 12(3), 2014. <https://doi.org/10.1017/S1537592714001595>
- [18] Federal Election Commission. Statistical summaries and campaign finance data for the 2023-2024 election cycle. <https://www.fec.gov/data/browse-data/?tab=spending>
- [19]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Federal financial regulators: revolving-door and regulatory-capture risk reports. <https://www.gao.gov/>
- [20] Opportunity Insights. The Opportunity Atlas: Mapping the Childhood Roots of Social Mobility. <https://www.opportunityatlas.org/>
- [21] Anne Case and Angus Deaton.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 deaths of despair research. <https://www.princeton.edu/~deaton/>
- [22] U.S. Census Bureau.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and the 2021 expanded Child Tax Credit. <https://www.census.gov/topics/income-poverty/supplemental-poverty-measure.html>
- [2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Labor Unions and the U.S. Economy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featured-stories/labor-unions-and-the-us-economy>
- [24]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Price of Attending an Undergraduate Institution. <https://nces.ed.gov/programs/coe/indicator/cua/undergrad-costs>
- [25] Internal Revenue Service. Statistics and research on capital gains and high-income returns. <https://www.irs.gov/statistics>
- [26]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4); Capital and Ideology (2020). <https://piketty.pse.ens.fr/en/>
- [27] Joseph E.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2012) and related research on rents and market power. <https://www8.gsb.columbia.edu/faculty/jstiglitz/>
- [28] Raj Chetty et al..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and neighborhood effects research. <https://opportunityinsights.org/>
- [29]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and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2001).
- [30]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Free to Choose (1980); negative income tax proposals.

결론

미국의 양극화는 “부자가 더 부유해졌다”는 한 문장보다 복잡하다. 핵심은 자산과 위험의 배분, 필수비용, 장소와 인종의 역사, 노동의 협상력, 정치적 영향력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경제적 격차는 사람들을 다른 학교·지역·미디어·직업세계로 분리하고, 그 분리는 상호불신과 문화전쟁을 강화하며, 정치적 고착은 다시 자산과 기회의 격차를 재생산한다.

따라서 해법도 단일한 부유세, 최저임금, 기본소득에 있지 않다. 성장과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가 생산성 이익을 공유하고, 주거·의료·교육의 진입비용을 낮추며, 저소득·중산층이 자산을 축적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이 자금과 접근의 불균등에 덜 지배되도록 만드는 제도 패키지가 필요하다.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Independent analysis for understanding American power.